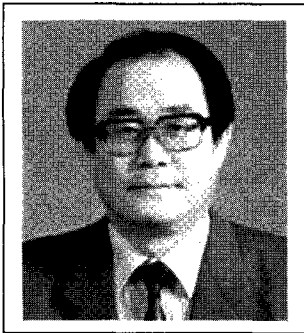


원전의 입지확보 현황과 추진방향

-봉길리 신규입지 승인을 중심으로-

김 중 원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입지추진반장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6일 정부로부터 원자력 신규입지 승인을 받았다. 이는 1979년 12월에 울진원자력 1·2호기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16년만의 일로서, 월성원전과 인접한 봉길리 지역에 4기 건설규모인 약 59만평의 부지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의 정부승인은 원전입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타 지역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원전입지 확보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력은 국민생활의 필수품이자 국가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햇빛·공기·물·식량과 같이 생존 필수품이기도 하다.

또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같은 기간중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깨끗

하고 편리한 에너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수요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증가추세는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전력수요전망과 전원개발계획

1. 장기전력수요 전망

94년도 최대전력수요는 2,670만 kW였으나 2006년에는 약 1.7배인 4,553만k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95년도의 경우 최대수요는 지난 8

월 18일 2,988만kW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1.9% 증가), 전력사용량 역시 94년도에는 1,465억kWh였으나 2006년도에는 2,735억kWh로 약 1.9배 증가할 전망이다(표 1).

또한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을 보더라도 94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우 3,297kWh로서 미국의 1/3, 프랑스·일본의 1/2,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에 비해서는 2/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력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표 2).

〈표 1〉 최대수요 및 전력사용량 증가추이

구 분	1994(실적)	2001	2006
최대수요(만kW)	2,670(1.0)	3,734(1.4)	4,553(1.7)
전력사용량(억kWh)	1,465(1.0)	2,216(1.5)	2,735(1.9)

주) 1. ()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 배수
 2. 19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 기준

〈표 2〉 각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 비교

국 가 명	한 국	미 국	프 랑 스	일 본
전력소비량 (kWh)	3,297 (1.0)	11,305 (3.4)	6,096 (1.8)	5,535 (1.5)

주) 1. ()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 배수
 2. 미국·프랑스는 1992년도, 일본은 1993년도 실적

〈표 3〉 발전소 신규건설계획(1995~2006)

단위: 만kW(기)

발 전 원	1995~2001	2002~2006	계
원 자 력	710(8)	570(6)	1,280(14)
석 탄	640(15)	405(6)	1,045(21)
L N G	150(1)	320(8)	470(9)
기 타	243(13)	100(4)	343(17)
계	1,743(37)	1,395(24)	3,138(61)

〈표 4〉 전원별 설비구성비

단위: %

발 전 원	1994(실적)	2001	2006
원 자 력	26.5	32.7	37.7
L N G	17.2	16.8	17.6
석 유	23.9	13.4	4.8
석 탄	23.7	27.2	29.8
화 력	8.7	9.9	10.1
계	100.0	100.0	100.0

2. 장기전원개발계획과 전원구성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4년말 기준으로 2,875만kW(95년 8월 현재 설비용량은 3,179만

kW)인 발전설비가 2006년도에는 지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5,394만kW로 증가될 전망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발전소의 증설은 불가 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매

우 빈약하여 총소비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유지에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의 공급구조를 다원화함과 동시에,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원의 특성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장기전력수급 계획은 95년 이후 2006년까지 총 61기(석탄화력 21기, 원전 14기, LNG·수력 등 26기) 3,138만kW의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주력전원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표 3), (표 4).

원전입지확보계획

1. 원전입지 현황

원전입지는 크게 원전 소재지와 후보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재지는 경남 1, 경북 2, 전남 1개소 등 총 4개소이며, 후보지는 경북 2, 전남 6, 강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이다(표 5).

원전소재지는 부산 양산, 경북 경주 및 울진, 전남 영광 등 4개소로서, 9기가 가동중이고, 7기가 건설중에 있으며, 4기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가 미확보된 3기의 원전중 1기는 중수로형, 2기는 경수로형 원전이다.

그 중 중수로 건설용 입지 1개소는 봉길리지역(월성원전 인근)을 대상으로 확보를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또한 경수로원전 2기 건설용 입지 1개소는 80년대 초반 원전입지 후보지로 지정·고시된 9개 지점 중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덕산(강원 삼척) 지역 및 송공(전남 신안)지역과 지역주민들이 원전건설을 유치한 고리원전 인접지역 중 지역사회와의 원전수용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지점과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검토중에 있는 명파(강원 고성), 내리(충남 태안)지역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건설되는 원전의 입지로 확보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입지 확보현황

1. 봉길리 신규원전 예정구역

가. 16년만의 예정구역 지정

지난 7월 6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로부터 원자력 신규입지 승인을 16년 만에 받았다.

이미 79년 12월에 울진원자력 1·2호기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월성원전과 인접한 봉길리지역에 약 4기 건설규모인 59만평의 부지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원

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신규입지는 올해 3월 30일 통상산업부에 전원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뒤, 정부 11개 부처의 서면협의 거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입지추진반이 발족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밀착홍보와 끈질긴 설득으로 올린 개가여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신규원전 적기 건설기를 마련

이렇게 봉길리지역을 원전건설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인 신규원전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정고시일 이후에는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원전건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의 예정구역 지정·고시는 원전입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타 지역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원전입지 확보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전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지점세부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정부(통상산업부)로부터 실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와 물리적 저항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었기에 따라, 이번 승인고시와 같이 우선 예정구역 지정을 한 후,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 원전입지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 많은 난관을 이겨낸 결착

이번의 지정·고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얻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월성원전 뒷산에, 그것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승인을 신청한 부지와 중복되는 지역에 대규모의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추진중이었다는 점이다.

이 매립장설립계획은 한국전력공사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신청보다 훨씬 이전부터 2개의 민간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문화재가 산재한 관광지역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행정관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사업계획적정통보라는 초기단계의 행정조치가 지연어냄으로써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입지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 6월 23일 본 예정구역지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1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산업부 차관)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예정구역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건」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이 달라 난상토론이 벌어져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만 무려 70여분이 소요되었다.

이날 환경부와 내무부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립장 예정부지를 원전 예정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11개 전 부처가 토론에 참여할 정도로 격론이 오갔다.

결국 추후 쓰레기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조건하에 두 부서가 양해를 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위원회 개최 전에 통상산업부 관계관과 공동으로 관련부처의 담당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원전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기타 주요 원전입지 확보활동

가. 효암·비학지역

경남 양산군 장안읍 효암부락과 울산군 서생면 비학부락은 고리원전 및 원자력연수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부락으로, 약 250세대가 농업과 어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이들 부락주민들은 70년대말 고리 1호기 건설 이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

자력본부 최인접지역에서 발전소 건설·가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운영실태를 몸소 보고 듣고 느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원전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서 그 동안의 체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원전의 안전성과 청정성을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발전소와 연수원의 중간에 위치함에 따라 장기적인 견지에서 지역의 발전을 고려, 한국전력공사가 재산권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지원을 만족스럽게 해 줄 경우 동 지역을 신규원전 건설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청원서(우리나라 원전사업상 최초의 자발적 유치신청)를 92년 3월에 제출하게 되었고, 93년 11월 주민총회에서 원전유치를 결의한 후, 고리원자력본부와 양 부락 주민대표들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원전건설 추진은 94년초 인근지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에 대한 격렬한 반대시위의 여파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재산권보상과 이주조건지원협상이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대표들 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 덕산지역

영동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9개 원전후보지 중에서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한 덕산지역 원전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3년 3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의 원전 시찰, 간담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덕산지역 원전입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93년 7월부터 입지지역 관할사업소인 삼척지점에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여 입지확보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 해외원전 시찰을 계기로 원전사업구역 편입지역의 인근인 근덕면지역에서 반원전 분위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근덕면지역 출신 삼척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근덕원전건설반대추진위원회」가 조직을 재 정비하고 원전건설 반대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외원전 시찰자와 친원전 주민들을 매향노로 매도하여 공직을 박탈함은 물론 생계생활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원전건설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원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또한 2회에 걸친 원전건설 반대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반원전 분위기가 삼척시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의장이며 삼척 출신인 당시의 모대학 총장도 이에 가세함으로써 상황이 최악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감안하여, 지역사회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분간은 광역권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다. 기타지역

전남지역 6개 원전 후보지중 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한 송공(전남 신안) 지역 원전입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동향 파악과 함께 지도인사들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하여 원전건설 수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평과(강원 고성)지역 역시 원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원전입지 확보의 단독추진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지역사회에서 선호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이외에도 다른 원전 후보지에 대하여 홍보자료 배부와 7개 지역주민 314명에 대하여 원전시찰을 수행하여 원전의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원전입지 확보 추진방향

1.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

79년 3월 미국에서 발생한 드리마일 아일랜드(TMI)원전 사고와 1986년 4월 옛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조시켰고, 이에 편승한 언론이 이를 과장 왜곡 보도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핵무기와 원전을 동일시하는 반핵단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반원전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원전에 대한 오도와

선동이 주효하여 원전 소재지와 후보지 지역주민들과 쉽게 연계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권리의식 수준향상과 다양한 욕구증대로 국가나 공동사회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방정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지역을 지키겠다는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의 입지확보 추진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을 백지화함에 따라, 아무리 중요한 국가사업일지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원전 등 국가사업의 추진기미가 보이면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도로점거·등교거부 등 불법시위를 날로 과격하게 전개해 가고 있다.

나. 원전 후보지역의 사회적 환경

89년 하반기 9개 지점 원전 후보지 공개 이후, 모든 후보지역은 반핵단체의 지원을 얻어 원전건설반대투쟁단체를 결성함과 동시에, 반핵단체에서 제공한 각종 허위 과장된 반원전 유인물을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원전건설을 무조

건 배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후보지역에서는 원전건설 및 원자력 관련시설 유치에 협조하는 주민을 매향노로 매도하여 고립시킴으로써 원전에 대한 대화 자체는 물론 홍보활동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간혹 원전사업구역 편입지역 주민들이 원전유치를 해 오더라도 지역사회에서의 민의합의·형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및 입후보 희망자 등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유세시에 원전건설 반대공약을 제시하거나 유권자 지지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건설 반대조직을 결성하는 한편, 후보지역 지방의회에서는 후보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원전 후보지역에 대한 입지확보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 원전 소재지역의 사회적 환경

원전건설과 운영과정을 지켜 본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은, 그간 원전의 안전운영과 꾸준한 홍보활동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수혜 등으로 인하여, 원전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원전 후보지역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과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불가능한 보상요구 뿐만 아니라 무리한 민원을 원전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지역도

일부 있다.

이러한 민원의 관철을 바라는 지역 주민과 이를 악용한 지역사회의 반원전단체들이 후속기 및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후속기 건설 및 원전 신규입지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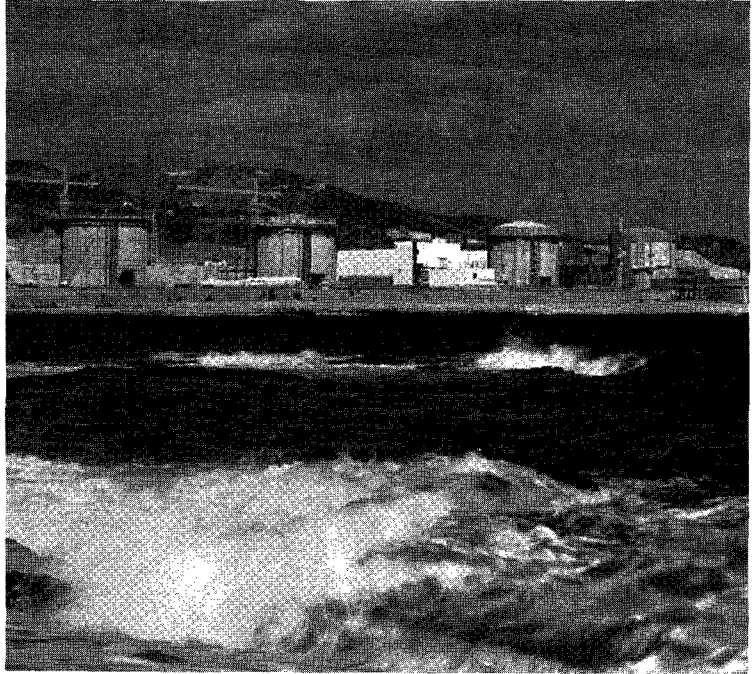
원전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의 사회적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주민 및 여론주도층에게 원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원전건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및 불신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획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지원 및 편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주대책 등 비전을 제시하여 원전사업이 지역사회와 공존·번영한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님비(NIMBY)현상의 반대현상인 PIMBY(Please In My Back Yard) 현상을 유발시켜 원전 신규입지를 원활히 확보해 나갈 것이다.

3. 입지확보 중점추진과제

가. 원전입지 홍보활동 지속강화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지방의회 의원·지역사회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에 대한 방문홍보를 통하여 원전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입지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에 대하여



월성 1호기와 건설중인 2·3·4호기

서는 국내외 원전시찰을 시행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며, 원전사업 설명회·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원전건설 수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다.

나. 당·정간의 원전건설 합의천명
원전사업구역 편입지역 주민들은 원전건설을 내심 환영하고 있으나, 인근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전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편입지역 주민간의 차원을 초월한 문제이다.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를 감안할 때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당 동의없이 한국전력공사만의 홍보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와 정당의 차원에서 국민 경제발전을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정책과 원전건설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 합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입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동 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입지 확보의 긴요성을 인식케 하여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원전 건설과 연계한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방안을 협의·결정함으로써 원활한 입지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 「원전건설추진협의회」 구성 및 지원

중앙 관계부처간의 「대책협의회」 결정에 따라 원전건설 사업구역 및 인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民·官·甍이 참여한 「원전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원전 바르게 알리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건설 반대인사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협의·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을 성취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등으로 원전 수용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입지 확보에 대한 전망과 기대

환경보호란 미명하에 조직한 각종 단체들은 환경보호운동 자체보다 반핵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원자력이 인류에게 끼친 양면적인 역할 중 발전·의료·종자개발·비파괴검사 등 평화적 이용인 천사로서의 역할은 부인하고, 인류 대량살상의 무기, 방사능 누출사고 등 악마로서의 역할만 부각시켜 원자력의 위험성을 과장 또는 허위로 유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불신케 하고 천

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도록 선동하고 있다.

그런데 대량 살상무기인 원자탄을 원자력의 악마로서의 역할의 대명사로 생각하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 원자탄의 투하로 수십만 국민이 죽고 항복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은 분명 악마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일본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고민하다가 전쟁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원자탄을 제작·사용한 미국의 입장이나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을 항복케 한 원자탄은 그 당시 분명히 천사였음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인류에 끼치고 있는 양면성 중에 악마로서의 역할도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물며 원자력의 천사로서의 역할인 전기 생산을 악마로 치부하여 인류행복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편파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원자력의 악마적 역할만 인식하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9개 원전 후보지역은 반원전단체와 연계하여 원전건설을 무조건 배격하는 등 원전입지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관계자들의 꾸준한 밀착홍보와 끈질긴 설득노력의 결과로 몇몇 지역에서는 원전건설을 수용하는 사례도 있다.

첫째로 봉길리지역을 들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3월 30일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지난 7월 6일 원전 신규입지 승인을 받으므로써 토지매수에 착수하는 등 신규원전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효암·비학지역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93년 11월 「집단지주 및 신규원전 유치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서명한 후 현재는 원전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될 주민의 재산권(토지·건설·어업권 등) 보상조건과 이주단지 조성 및 이주지원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봉길지역 역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이주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원전건설을 수용하는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전개하여, 원전이 악마가 아닌 천사로서 인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사실로서 가시화된다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원전건설을 적극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